

기본연구 2007-17

충남 중소기업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신동호

발 간 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 주체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은 지원주체별로 입지, 자금, 신용보증, 판로, 인력, 수출, 기술·정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지원주체별로 복잡·다기화 되었으나, 실제로 중소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지원의 주체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시책의 운용에 중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각종 시책의 운용을 체계화함으로써 실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다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기관들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기관간의 실질적인 협력적 네트워크체계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의 실효적 공급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쪼록 본 연구가 충남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0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차 례

제 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주요내용	4
제 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5
1. 이론적 배경	5
1) 로컬 거버넌스 이론	5
2) 네트워크 이론	10
3) 지역혁신체계	13
2. 선행연구 검토	16
1) 관련 연구동향	16
제 3장 충남 중소기업 지원체계 실태	21
1. 충남 중소기업 지원기관 현황	21
1)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2
2) 충남테크노파크	26
3) 충남신용보증재단	31
4) 충청남도	33

2. 충남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35
1) 지원체계의 문제점	35
2) 향후과제 도출	38

제 4장 국외사례 및 설문조사

1. 해외 중소기업 지원체계	39
1) 미국	39
2) 일본	41
3) 대만	44
4) 시사점	48
2. 설문조사	49
1) 개요	49
2) 설문응답 일반사항	51
3) 설문조사 결과	54
4) 정책적 시사점	60

제 5장 충남 중소기업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61
2. 단계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1) 1단계 : 지원기관별 역할분담	61
2) 2단계 : 핵심지원기관의 역량강화	63
3) 3단계 : 지역단위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65

제 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67
2. 정책제언	67

참 고 문 헌

표 차례

<표 1-1> 사례 및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
<표 2-1> 거버넌스의 결정요인	7
<표 2-2> 네트워크 문제해결과정의 특징	10
<표 2-3> 네트워크 활성화 조건	11
<표 2-4>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15
<표 2-5> 선행연구 검토사항	20
<표 3-1>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현황	26
<표 3-2> 충남테크노파크 부서별 기능	28
<표 3-3> 충남테크노파크 주요사업 성과	30
<표 3-4> 지원기관별 지원사업 비교	37
<표 4-1> 시군별 설문응답률	52
<표 4-2> 시군별 및 권역별 분포	53
<표 4-3>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의 기업지원 노력	55
<표 5-1> 기능·업무별 역할분담(안)	63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4
(그림 2-1)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균형관계	9
(그림 3-1) 충남 중소기업 지원기관 구조	21
(그림 3-2)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직도	23
(그림 3-3) 충남중소기업지원센터 주요사업	24
(그림 3-4) 충남테크노파크 조직도	27
(그림 3-5)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도	32
(그림 3-6) 충남 경제통상실 조직도	34
(그림 4-1)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39
(그림 4-2)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42
(그림 4-3)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45
(그림 4-4) 권역별 응답업체 분포	53
(그림 4-5) 충남도의 기업지원 노력	54
(그림 4-6) 충남의 기업지원활동	56
(그림 4-7)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시책평가	57
(그림 4-8) 가장 먼저 이용하는 기관 및 협조적인 기관	58
(그림 4-9) 행정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이용시 어려운점	59
(그림 4-10) 행정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의 개선필요 사항	59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복잡·다기화에 따른 지원효과 저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 주체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은 지원주체별로 입지, 자금, 신용보증, 판로, 인력, 수출, 기술·정보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소관부처(21개), 지원기관(146개)이 많고, 지원내용 또한 해당기관별로 복잡·다양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지원주체별로 복잡·다기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각종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지원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요자 중심의 지원시책 수립 요망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원의 주체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시책의 운용에 중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각종 시책의 운용을 체계화함으로써 실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3) 지원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크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대

현재, 충남 중소기업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기관들간에 역할 및 기능의 불명확성에 따른 지원체계의 중복성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지원시책들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다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기관들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2) 연구목적

(1)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체계구축

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기관간의 실질적인 협력적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충남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의 실효적 공급을 위한 통합지원체계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공급자 즉, 지원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응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충청남도내 전지역 및 국내외 사례지역이며, 내용적 범위는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해외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사례,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업무추진실태, 지원기관간 연계·협력실태 등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기관을 충남도 및 출연기관으로 제한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타 유관지원기관들의 운영은 중앙정부및 각 부처별 의사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충남도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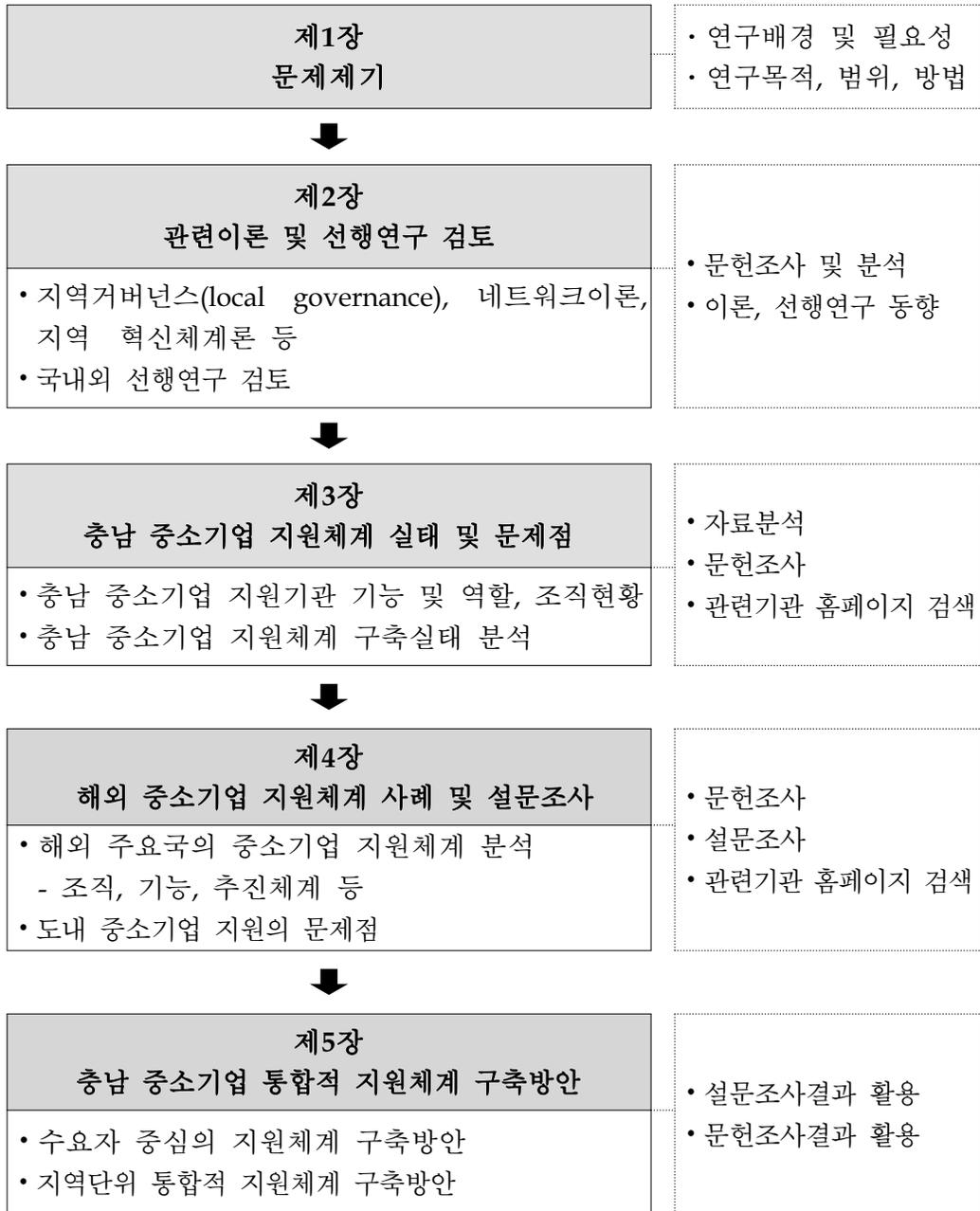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충남 중소기업 지원실태는 기존 연구성과 및 충남도 문건 등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종합·정리하고, 국내외 사례조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표 1-1〉 사례 및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및 방법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내용	·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업무추진 조직 분석
	추진방식	· 문헌조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검색 등
설문조사	조사목적	· 중소기업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수렴
	조사대상	· 중소 제조업체
	조사방법	· 설문지 우편조사
	주요조사내용	· 중소기업 지원실태 및 개선방향 ·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애로사항 · 중소기업지원기관 이용시 불편사항 등
	조사일정	· 2007. 2. 1~3. 10(38일간)

3. 연구의 주요내용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로컬 거버넌스 이론(local governance theory)

(1) 배경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흥미되고 있는 용어다. 외국에서는 1980년대 초 영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논의된 후 영국의 정책결정시스템에 도입되고 OECD 국가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지금은 사회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실무현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Leach & Percy-Smith, 2001). 1980년대부터 거버넌스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은 첫째, 정책의 영향을 받는 민간부문이 공공정책에 관여하려는 강력한 요구, 둘째, 후기 관료국가(post-bureaucratic state)로의 이동, 셋째,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담보 등을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John, 2001; 9-17).

(2) 개념

최근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화는(Danis, 2002; Carmichael, 2002; Goodwin and Painter, 1996; Jessop, 1995, 1997; Judge et al. 1995; Rhode, 1996, 1997; Rose, 1996; Stoker, 1996, 1997)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의 새로운 상호의존성, 새로운 집단행동, 정치활동의 장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가진 중요성에 대한 가정의 상실 등에 기반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활동사이에 있는 불분명한 경계(Stoker, 1996)를 이론화하고, 권력, 의사결정 및 기관끼리의 상호작용에 관한 중

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 및 기관들이 자원과 기술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복잡한 정책결정의 망 속으로 기여하게 하는가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강조한다.

거버넌스는 한마디로 정의하긴 힘들지만 과거처럼 관료들이 일방적,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 내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 - 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형태(John, 2001; 9)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공공의사결정이 더 이상 계층적으로 조직화된 관료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수준(국가적, 광역적, 지역적 수준 등)의 정책네트워크 내에 있는 여러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 2-1〉 거버넌스의 결정요인

구분	세부요소
자원	자금
	공간, 장비, 재화
	기술과 전문지식
	정보
	사람, 조직, 집단에 대한 연계
	승인(endorsements)
	소집능력(convening power)
파트너의 특징	이질성(heterogeneity)
	관여수준(level of involvement)
파트너들간의 관계	신뢰
	존경
	감동
	권한차별
파트너십의 특성	리더십
	행정 및 관리
	운영체제
	효율성
외부환경	지역사회 특성
	공공 및 조직정책

자료 : Lasker, et, al. 2001, p189.

(3) 로컬 거버넌스의 대두 및 이론적 함의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사협력체제와 네트워크 구조를 말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며, 지역주민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재를 개발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문병기, 2003).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독립된 정치적 활동공간으로 이해하며, 비인격화된 계서적 통치에 의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미래를 경영하는 지방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재현(2000)에 의하면,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는 정치 및 행정현상 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로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을 위한 주된 기체가 무엇이며 또 무엇이여야 하는가'의 논점과 맞물려서 지난 세기의 후반부 동안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근대화가 가속화되었던 20세기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교리는 정부관료제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많은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시장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교리 또한 공공관료제를 비판하면서 그 명맥을 줄곧 유지해 왔으며, 특히 1980년대부터는 공공관료제 옹호론을 대치하여 행정연구의 담론을 주도하는 위치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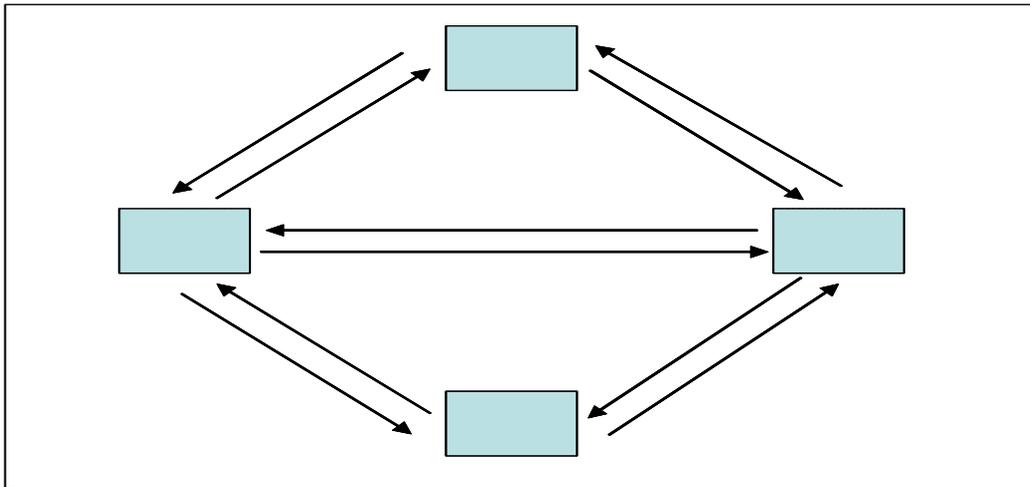
전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후자의 입장은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역할의 감소와 시장기체의 작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사적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입장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협조적이기보다는 대립적 또는 적대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관료제에 의한 과도한 시장개입과 독점적인 서비스 제공도 민영화 등 시장부문에 의존한 서비스 제공도 모두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에 공공부문에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공공부문에서는 사익이 아닌 공익이 행위의 주된 동인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이다.

최근 10여년 동안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거버넌스-로컬 거버넌스의 관점은 이처럼 정부관료제나 시장기체 일방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를 지역 내 구성원이 주체

가 되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변화된 상황하에 정부와 기업관계를 협조적 관점으로 파악하려는 새로운 접근이다.

거버넌스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태는 기본적으로 각 행위자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Koolman, 1994; 195). (그림2-1)은 각 행위자들이 서로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Koolman(ed).1994, p195.

(그림 2-1)네트워크 행위자들의 균형관계

이러한 기본패턴에 따라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자들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행위자들과 자원을 교환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한다. 거버넌스 연구의 권위자인 Rhodes(1997)는 정책네트워크내의 행위주체들(actors)이 자원 의존(resource dependency)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고도로 통합된 정책네트워크에서 느슨하게 통합된 이슈네트워크까지 다양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융통성이 있을 것이며 위에서 제시한 환경적 조건을 검토하여 다양한 변형 형태가 있을 수 있다.

2) 네트워크 이론

(1) 네트워크의 개념과 특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에는 공공, 민간, 그리고 비정부 조직간의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개념이 포함된다.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속에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가지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는데, 그 전자인 경쟁 또는 시장의 논리가 신공공 관리론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협력은 정책영역에서의 네트워크라는 기제를 통해 발현된다고 할 것이다(박원표 외, 2003).

이러한 네트워크는 교환 및 상호관계, 공통의 이해, 공유된 신념과 전문적 시각을 통한 유대와 같은 공식적·비공식적인 모든 연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실행기제의 문제해결 과정은 <표 2-2>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2-2> 네트워크 문제해결과정의 특징

구분	문제해결과정의 특징
네트워크	• 문제의 복합성
	• 행위자들간의 상호의존성
	• 네트워크 내 협상·게임행위
	• 행위자들간의 상호학습과정

자료 : 주재현(2000).

첫째, 취급되어야 할 문제가 복합성을 띠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복합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내의 문제들 또한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둘째, 문제해결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행위자와 민간부문의 행위자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많은 행위자와 이익세력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여한 행위자들간의 성공적인 조정여부가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관건이 된다.

셋째, 행위자들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하므로, 네트워크 내에서의 행위는 협상 또는 게임의 특성을 띤다.

넷째, 참여한 행위자들간에 학습과정이 발생한다. 즉 행위자들간의 협상은 정보의 교환을 가능케 하며, 이에 따라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상호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네트워크의 활성화 조건

네트워크의 활성화 조건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첫째, 전통적인 권위와 문제해결 수단들의 실패 또는 쇠퇴, 둘째 이익의 중재를 가능케 하는 조직형태와 패턴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정치적 활동영역의 등장, 셋째 특정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행위자 모두에게 관련되는 커다란 관심사항들의 부각, 넷째 여러행위자들의 목적 및 이익수렴과 그들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가능성의 존재 등이다.

〈표 2-3〉 네트워크 활성화 조건

구분	활성화 조건	
네트워크	• 전통적 권위와 문제해결 수단의 실패 또는 쇠퇴	• 상호신뢰와 이해의 존재
	• 새로운 이익중재 활동영역의 등장	• 책임공유의 준비성
	• 행위자 공통의 관심부각	• 정치적·사회적 지지
	•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존재	-

자료 : 주재현(2000).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심리상태와 관계된 주관적 조건으로는 첫째, 상호신뢰와 이해의 존재, 둘째 책임을 공유할 준비성, 셋째 정치적·사회적 지지의 존재 등이다. 이러한 객관적, 주관적 조건들이 특정의 촉발요인이나 중개요인

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로컬거버넌스의 협조적 네트워크

로컬 거버넌스 개념속의 협조적 네트워크는 공공정책부문의 주요 행위자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은 대리인체제라고 할 수 있는 대의 민주주의체제가 배출한 비능률과 상호불신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직접민주주의체제로 가기 위한 전이단계에서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참여자간 네트워크체제는 단순한 협조체제라기 보다는 정부-시민단체-기업의 참여자간의 갈등과 협력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협력체제인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을 대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한 국가내의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고 또 통제와 조정을 행사하는 통치구조를 계층제와 시장의 이분법으로 파악되었던 것이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고 계층제와 시장에 더하여 네트워크를 또 하나의 실행기제로 파악하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어 정부와 기업이 대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파악되어야 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화, 지방분권화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지속적 번영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도입·활용·교류·수정·확산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일정지역 내의 연결망, 즉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기능 및 지원서비스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지식과 기술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지역혁신체계

(1)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상호작용적 학습의 적정단위로서의 지역내의 혁신주체들간의 신뢰와 호혜성을 토대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협력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주체들간의 상호작용적 학습이 혁신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이며, 그 적정단위는 국가가 아닌 지역이며, 여기서 지역의 범위는 통상국가의 차하위 단위 지역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지리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혁신주체는 연구개발주체와는 구분되는데, 본연의 의미에서 혁신의 실질적 주체는 기업이며, 정책의 최종수혜자도 기업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광의로 해석하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주체들을 모두 포괄하여 혁신주체라 할 수도 있다. 혁신의 대상은 기술 뿐만 아니라 조직, 마케팅, 재무활동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있으며, 따라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문별 기업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혁신체계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혁신주체간의 상호작용적 학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과를 높이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혁신정책의 핵심은 이를 위한 지역혁신주체들간의 신뢰기반형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이라 할 수 있다.

(2)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① Cooke의 기업지원 지배구조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구분

현실에서의 지역혁신체제를 지역의 기술이전 양식, 즉 지역의 기업지원제도 또는 soft-infrastructure에 따라 미시지역적 양식, 네트워크양식, 통제적 양식으로 구분한다. 지역혁신체계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이전의 초기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

지, 금융조달이 국지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의 조정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한다.

통제적(dirigiste) 지역혁신체계의 대표적 사례는 프랑스를 들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기술이전 활동자체가 외부로부터 시작되고 국가 차원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시지역적(grassroots) 지역혁신시스템은 일본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Kohsetsushi system, 이태리의 북부산업지구인 Emilia-Romagna와 Tuscany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서는 기술이전의 초기과정이 도시나 지구 등과 같이 국지적으로 조직됨에 따라 지역을 넘어선 조정의 정도는 낮다.

네트워크(network) 지역혁신체계의 대표적 사례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기술이전 활동이 다차원에서 진행되며, 혁신체제의 조정방식도 정부는 물론, 협회, 포럼,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간의 상호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② Cooke의 기업혁신 특성에 의한 구분

지역유형구분의 둘째 차원은 기업의 생산조직 측면에서 지역내·기업간의 공간적 상호작용방식의 특성에 따라 국지적, 상호작용적, 세계적 지역혁신체제로 구분된다. 국지화된 지역혁신체제는 대기업이 드물거나 지배정도가 낮고, 따라서 외부통제의 정도가 낮다. 기업의 혁신범위도 크지 않으며, 공공의 혁신자원이 부족하며,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기업내부 또는 기업간에 이루어진다.

세계화된 지역혁신체계에서는 세계적 기업과 대기업 의존적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공급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과정이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상호작용적 지역혁신체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협력문화가 존재한다.

〈표 2-4〉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구분		기업지원의 지배구조 또는 소프트 인프라		
		미시지역적 (grassroots)	네트워크 (network)	통제적 (dirigiste)
네트 워크	국지적 (localist)	투스카니 (이탈리아)	탐페레 (덴마크)	도호쿠 (일본)
	상호작용적 (interactive)	캘리포니아 (미국)	바덴-뷔르템베르크 (독일)	퀘벡 (캐나다)
	세계적 (globalized)	온타리오, 캘리포니아	north rhine-westphalia	midi-pyreneess, 싱가포르

자료 : Cook, 1998, Regional Innovation System.

(3)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적 유용성 및 한계

① 지역혁신체계의 유용성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은 혁신과정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혁신주체간의 상호작용과 학습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현상을 연계시키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은 지역혁신체계의 역량분석 및 잠재력 측정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구성주체의 잠재능력과 상호작용 정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된다. 또한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은 시스템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여 상이한 지역에 대한 비교를 가능케 하며, 이론중심의 개발모델과는 달리 성장지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도 발전모델로 채택할 수 있거나 적용이 가능하다.

끝으로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수준에서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역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치를 통한 정책결정권, 조세권, 재원에 대한 통제권 등을 지역이 소유하는 경우 지역의 제도적 기반구축 및 도약을 위한 제도의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지방분권화는 동시에 상호연계하여 추구해야 한다.

② 지역혁신체계의 한계

위와 같은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RIS는 개념상 방법론상으로 여러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적 분석도구로서의 정밀성이 부족하여 현실적인 복잡한 행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보다는 혁신주체에 대한 개념화 또는 일부 주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단순화하게 된다.

경제성장과 혁신체제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오랜 기간을 소요하면서 사회자본의 형성 즉, 제도의 고착을 가져오게 된다. 지역혁신체계 연구가 지역 일반수준에서 조직, 제도, 문화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한 지역 내에서도 산업부문에 따라 상이한 혁신체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현재 고착화된 산업과 제도적 기반하에서 새로운 혁신체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기 어렵다.

2.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연구동향

(1)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김근세(2001)는 중소기업지원 행정은 국가의 생산기능에 해당하므로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자본축적 기능에 개입하는 국가행정기구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되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는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준별로 즉, 정책개발, 사업개발, 서비스 전달기능간 적절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본청-지방청간에 기능분화와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청 본청-지방청-중소기업진흥공단간의 사무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를 든다.

오철호(2004)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중소기업 정책, 그리고 수요자인 중소

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정부부처간의 기능분담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집행기능의 중복적 수행이라는 현행체제의 문제점은 실수요자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을 통해 해결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직면하는 개혁과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호(2001)는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의 주체로 중소기업 정책집행기능의 중복적 수행이라는 문제점을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조직 및 역할을 지역중소기업이라는 수요자 측면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영출(2003)은 로컬거버넌스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로컬거버넌스적 접근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원, 파트너의 특성, 파트너들의 관계, 파트너쉽의 특성, 외부환경 등의 결정요인들이 수준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목표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관여할 수 있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제도적·운영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고안해야하며, 상호작용이 갈등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정과 중재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희용·박태경(2004)은 국내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 재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형 지역혁신체계모형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기관과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런 연후에 혁신주체들을 조율하고 전반적인 혁신을 조장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꼽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혁신은행과 R&D + Marketing 조직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미성(2004)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사례를 중심으로 기관간 역할분담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기관간 역할·기능의 분담과 협력체계 미구축, 중소기업지원기관별 특성화 및 역할의 미정립으로 보고, 기관별 역할의 재정립 및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원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

업지원정책을 광역적인 기능과 준광역적인 기능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업정책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급 지원기관의 설립 목적과 전문화된 능력에 기초하여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태석(2004)은 인천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원기관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가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원기관별로 핵심추진사업의 업무를 분장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천중기센터의 핵심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충하고 인력의 양과 질 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제도 개발·운영, 인천시의 기업지원업무 이양, 인천중기센터 지사화 추진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원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인천시 출연기관의 통합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출연기관 통합작업은 1단계로 인천광역시 직속의 인천시 출연기관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2단계로 출연기관과 관련한 모든 예산, 행정, 사업을 한 곳에서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단일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권영미(2005)는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 추진의지, 다양한 지원참여,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의 실질적 구성이 요구되며, 지원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재정적 지원, 참여자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장하였다.

허만영(2002)은 국내 중소기업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원수단의 중앙집권화, 지원업무의 중복, 자치단체 관련 조직 및 기능의 취약성,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행정규제의 과다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중소기업지원업무의 지방이전, 지원기능재분배, 지원조직 및 기능강화, 지원네트워크구축,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원용(2003)은 중소기업지원시책과 관련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소기업지원과 유관기관간 업무협조체제의 취약성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지원행정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일련의 서비

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개발을 역설하고 있다.

조연상(1997)은 대전·충남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기관이 설정되거나 지원기관들의 협력체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대안으로 각 지원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최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선정과 지원방법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2-5〉 선행연구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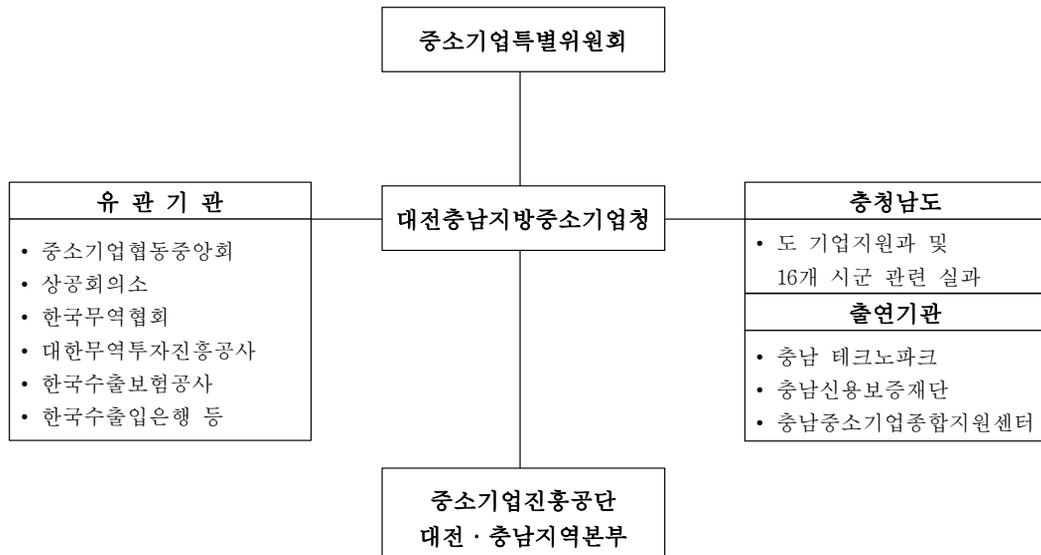
연구자	대 상 지 역	연구명	방법론	비고
이희용·박태경 (2004)	한국	중소기업지원 및 혁신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	중소기업 진흥공단
권영미(2005)	한국	지역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사례분석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오철호(2004)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지원체계 개선방향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
최원용 (2003)	경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방안 -반월·시화공단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연상 (1997)	대전· 충남	대전·충남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설문분석 사례분석	한국은행 대전지점
이상호 (2001)	해외	외국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 사례 및 시사점	사례분석	한국행정학회
최영출 (2003)	국내	거버넌스이론과 지역발전전략	-	충북대학교
문미성 (2004)	경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역할분담	사례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오태석 (2004)	인천	인천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사례분석	인천발전연구원
허만영 (2002)	울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사례분석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김근세(2001)	한국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구조분석과 대안	사례분석	한국행정학회
Carmichael (2002)	-	Maintaining a Distinctive Public Administration : the Isle of Man Civil Service Since 1962	-	Public Administration
Paul Cloke et al.(2000)	-	Partnership & Policy Network in Rural Local Governance	-	Public Administration
Davies (2002)	-	Power,politics & Network : shaping partnership for sustainable communities	-	Area
Lasker et al.(2001)	-	Partnership Synergy : A practical framework for studying and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advantage	-	The Millbank
Leach & Percy-Smith(2001)	Britain	Local Governance in Britain	-	Palgrave

제3장 충남 중소기업 지원체계 실태

1. 충남 중소기업 지원기관 현황

국내 중소기업지원체계는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르는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간 정책조정 및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기업정책을 입안하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정책을 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충남도 차원에서는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및 16개 시군 관련실과에서 중소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있다.



(그림 3-1) 충남 중소기업 지원기관 구조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 지역본부,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대전·충남지회, 충남북부 및 서부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전·충남무역관,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한국수출입은행 대전·충청본부 등이 있다.

1)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 기능 및 역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가 지방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설립되었다.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배양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경영, 자금, 인력, 기술, 무역, 정보제공 및 제품 판로개척 등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9년 1월 15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개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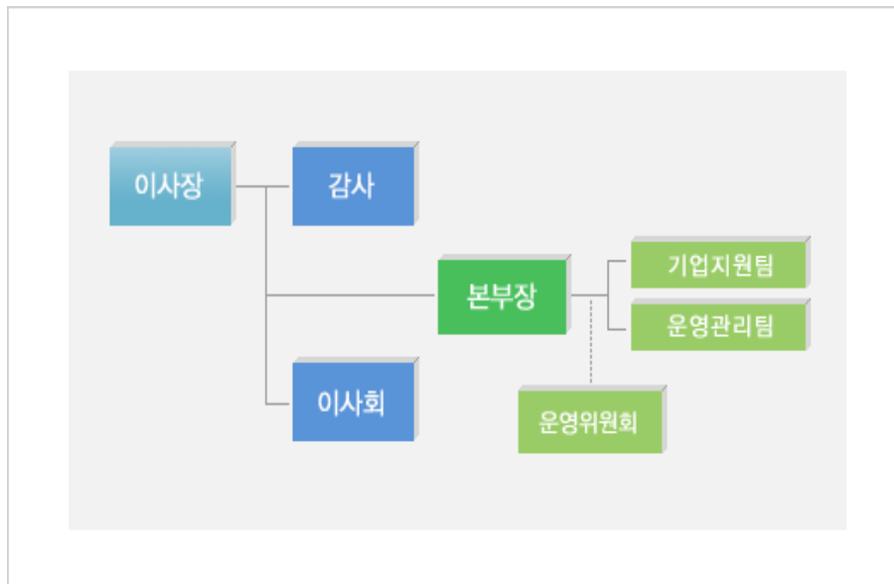
주요기능으로는 기업지원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기술·경영 연수사업 및 창업보육사업 추진,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각종 경영·창업정보 및 자료제공, 중소기업 제품 공동전시·판매 및 도 위탁사업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센터 내에서 각종 기업지원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One-Roof-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2) 센터현황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舊 아산시 청사에 소재하며, 센터 내 16개 유관기관, 벤처·창업보육 관련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초기에는 충남테크노파크와 통합운영되었으나, 2003년 4월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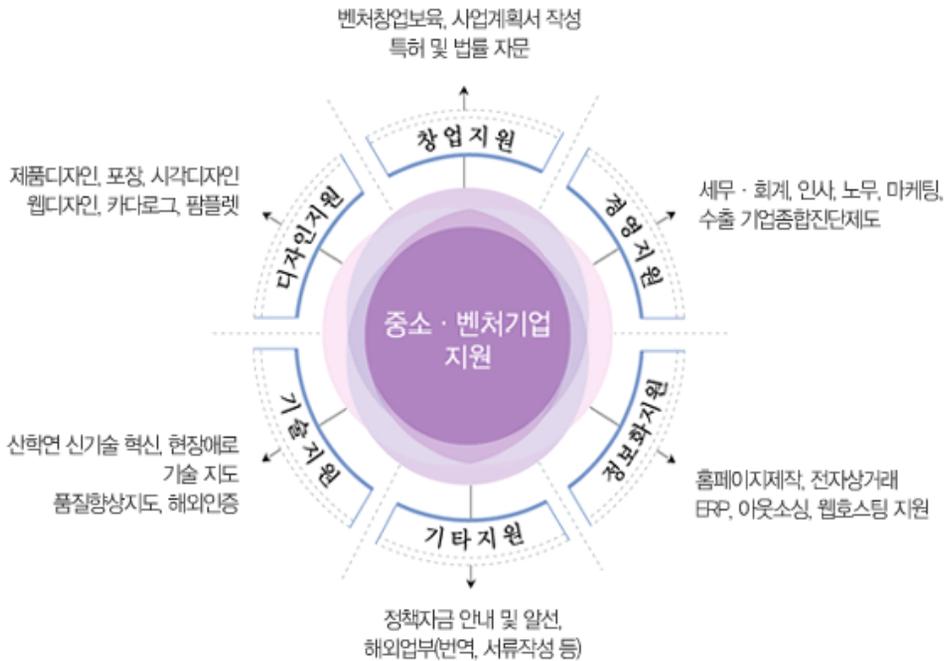
건비 절감과 경영혁신합리화를 위해 양 법인을 충남테크노파크 본부장이 겸직하는 운영체제로 통합코자 하였으나, 법인간 설립목적과 허가기관이 다르고, 해산되는 법인의 국고지원 출연금 반환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직은 2팀(기원지원팀, 운영관리팀), 2센터(전자상거래지원센터, 벤처경영지원센터), 1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있고, 자본금은 기본재산 500백만원과 출연금 115억(중기청 50억, 도비 65억)을 합하여 총 165억원이다.



(그림 3-2)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직도

(3) 주요사업



(그림 3-3) 충남중소기업지원센터 주요사업

1 경영지원

충남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센터 내·외 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영, 자금, 수출, 회계, 법률 등 경영전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지원 또는 유관기관을 통한 연계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정보지원

충남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한 기업정보 및 생산제품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기존 기업들에는 각종 맞춤형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정책기관들에게 지역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산업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③ 창업·보육지원

사업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과정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 시키고, 자금과 기술의 중점지원을 통하여 벤처기업으로서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지원자금, 판로지원, 경영컨설팅지원, 사업상담, 기타 재단 사업연계 지원 등의 종합지원과 정보통신인프라 제공, 사무실 운영지원, 공동작업장운영, 각종 기계설시지원 등의 설비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④ 전자상거래 지원

기업 및 공공기관이 전자상거래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EC, CALS, EDI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정보제공 컨설팅 및 기술을 지원한다.

⑤ 산업인력지원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채용의 기회를 확대시켜줌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제고시키고자 충남산업인력정보망,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간씨도리통신의 실시간 알림화면을 통해 채용공고를 낸다.

⑥ 판로지원

지역의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도 판로 및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하여 제품홍보 및 판매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전시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지원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제품 및 지역상품 등의 판매지원을 목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인 충남플러스(<http://www.chungnamplus.co.kr>)를 운영하고 있다.

(4) 운영상의 문제점

현재, 센터의 본부장을 도 경제통상실장이 겸직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

며, 소유측면에서 건물과 부지가 각각 중기센터 및 충남테크노파크로 이원화 되어 있어 재산관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1988년에 준공된 舊 아산시청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청사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에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운영비 지원 없이 입주기관의 임대료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1본부 2침, 1지소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중기센터 부지 소유권 일원화를 위해 산자부와 협의 불가시 유상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센터 역량강화 및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남부지소 설치 및 인력증원에 따른 운영비 보조, 기업인 대회 등 업무위탁 등을 추진 중이다.

2) 충남테크노파크

(1) 기능 및 역할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하여 1999년 1월 개원하였다.

충남테크노파크의 출연기관으로는 산자부, 도, 천안·아산시, 12개 대학, 제일은행 등이며, 출연금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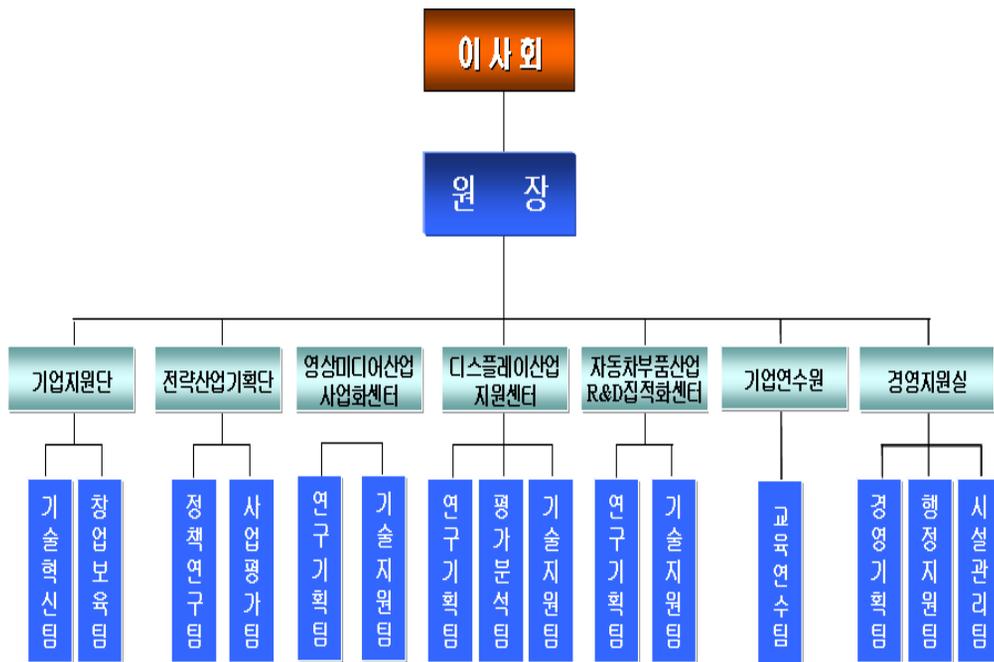
(단위:억원)

계	산자부	지 자 체			대 학 / 은 행	
		도	천안시	아산시	대 학	은 행
544.57 (100%)	253.57 (47%)	150 (28%)	50 (9%)	39 (7%)	24.5 (4%)	27 (5%)

충남테크노파크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의 거점 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혁신주체 네트워크에 의한 종합적인 기업지원체계 구축, 둘째, 지역 혁신 거점화를 통한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셋째, 혁신 기관으로서의 테크노파크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센터현황

충남테크노파크는 2단(전략산업기획단, 기업지원단), 3센터(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자동차부품산업R&D집적화센터), 1원(기업연수원), 1실(경영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과 센터, 원 내에는 총 15개팀이 조직되어 있다.



(그림 3-4) 충남테크노파크 조직도

2단, 3센터, 1원, 1실, 15팀(정원 59명)으로 조직된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기능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주요시설로는 기술혁신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POST BI(생산변영성공관), 물류지원센터, 정밀가공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표 3-2〉 충남테크노파크 부서별 기능

구분	부서별 기능
기업지원단	○ 기업지원 서비스 - 창업보육,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업유치 등
전략산업기획단	○ 전략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지역산업 기술혁신 로드맵 작성 등
영상미디어센터	○ 특화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디스플레이센터	○ 특화산업분야의 공동장비 구축, 기업활용 지원
자동차부품센터	○ 전문연구기관 및 우수기업 유치, 운영활성화 추진
기업연수원	○ 산학연관 등 혁신주체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중점
경영지원실	○ 재단 사업계획 수립 조정 ○ 재단 인사, 회계 업무 지원

(3) 주요사업

① 창업보육

벤처창업촉진과 스타기업육성 차원에서 혁신주도형 스타벤처기업 육성, 대학창업 기반지원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보육과 관련하여 실험실 창업동아리 육성, 대학창업보육센터(BI)지원육성, 천안밸리 Post-BI운영,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신기술 창업보육사업(TBI)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센터 내 입주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벤처관 15업체, 생산관 10업체, 번영관 15업체, 성공관 2업체, 구관 2업체 등 총 44개 업체가 651명을 고용하여, 2006년 현재 매출액 73,387백만원, 수출액 5,829천\$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② 연구개발

수요자 중심의 산·학 공동연구개발 차원에서 대학연구센터(RRC)지원, 산·학 혁

신기술의 사업화지원, R&D사업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학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은 연구개발 및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학/연구소와 중소·벤처기업의 공동연구개발 및 개발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③ 장비구축활용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해 기업이 현실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고가의 연구시험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비용 절감효과를 도모한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장비 및 인력DB구축함과 동시에, 지역기술혁신센터(TIC) 및 정밀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④ 교육·훈련

수요자 중심의 실무교육을 위해 맞춤형·경영·기술·창업교육을 지원하며, 인력양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연수원 운영, 1사 1대학 맞춤형 교육연계, 지역혁신 연구인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대학·기업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취업 전문 산학연정 컨소시엄 구성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제공함으로써, 충남지역 이공계 출신 미취업자의 취업률을 향상하고 지역혁신 인력양성 체제구축을 도모한다.

⑤ 자금지원

지역중소벤처기업의 자금지원 사업으로 충남벤처 투자조합 1, 2, 3호(총 250억원)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타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지원하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⑥ 마케팅 지원

충청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차원에서 충청권 3개 시·도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판로개척의 장으로 충청권 벤처프라자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해 KOTRA, 중기청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및 국내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3-3〉 충남테크노파크 주요사업 성과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주요성과
기업지원 단	· 기술혁신형 연구개발사업	· 대학보유 고가장비 활용 · 산학공동연구개발	· 특허출원 · 등록 559건 · 기술지도 5,203건 · 기술이전 466건 · 장비구축 505건
	·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 해외시장개척지원 - 전시회, 박람회, 상담회 등의 참가 및 개최	· 수출상담액 2,879만\$ · 샘플오더 65만\$ · 수출계약체결 452만\$
	· 신기술 보육사업	· 시제품개발지원	· 매출액 85,326백만원 · 고용창출 467명 · 특허/시제품개발 193건
	·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 우수 R&D개발과제 지원	· 고급인력양성 171명 · 고용창출 56명 · 특허/시제품 20건
	· 충남기술이전센터 운영	· 기술 발굴,평가,마케팅 · 알선협상 및 계약지원	· 거래건수 55건 · 거래금액 1,995백만원
	· 천안밸리 POST-BI운영	· 기반시설 조성	· 2개사 코스닥 상장 · 6개 기업 단지조성
	· 충남벤처투자조합 관리운영	· 벤처조합 결성	· 40개업체 250억 투자 · 상생투자펀드 2개조합
	· 충청권벤처프라자 개최	· 3개시도 벤처프라자 순회개최	· 6년 동안 1,830건 상담
	·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 마련	· 2개사 창업
·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육성	· 공간장비 및 경영서비스제공	· 310개 기업입주 · 58개 기업 졸업	
전략산업 기획단	· 인프라구축사업	· 기반정비사업 · 특화센터신설	-
	· 기술개발	· 선도기술, 전략기획, 혁신 자원형 및 단기간형 기술개발	-
	· 기업지원서비스	· 기술,마케팅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육성	-
	· 인력양성	· 전문인력 양성	-
영상미디 어센터	· 공용장비구축	-	· 36개기업 유치
	·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	· 고용창출 350, 수출2억\$
디스플레이 이센터	· 부품소재장비 개발지원	-	· 11개기업유치, 94개기업지원 · 지원건수 3,058건
자동차부 품센터	· 통합기술시스템 구축	· 장비 및 센터 건축	-
기업연수 원	· 전문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 교육훈련사업 · 이공계미취업자 연수 · 인적자원 개발 · 산학연 연계정보화교육	· 73명 취업 · 297명 교육

3) 충남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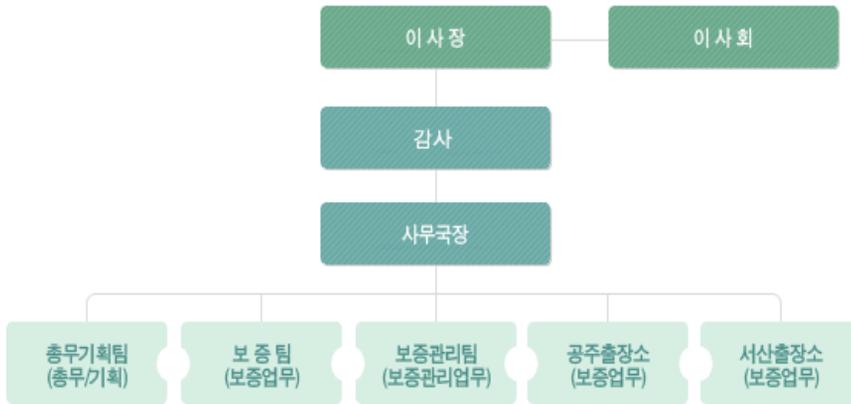
(1) 기능 및 역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충청남도과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8년 10월에 설립 되었다.

동 재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촉진 및 성장지원, 금융기관 거래 신용도 우수기업 추천 보증제 실시, 재래시장 특례 보증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전략 보증상품 개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배정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충남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 차원에서 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성장산업 분야, 지역특화산업 및 향토산업에 대한 특화보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 조직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사무국, 3팀(총무기획팀, 보증팀, 보증관리팀), 2출장소(공주출장소, 서산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증팀내 보증1과는 천안지역을, 보증2과는 아산, 연기, 예산지역의 보증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보증관리팀은 충남전역의 사고관리 및 보증채무이행, 구상채권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3-5)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직도

한편, 공주출장소는 계룡,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금산지역을 담당하고, 서산출장소는 보령, 서산, 당진, 태안, 홍성지역을 대상으로 보증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3) 주요사업

① 대출보증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및 당좌대출 포함)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급보증의 보증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③ 비은행대출 보증

소기업 등이 비은행금융기관 (농, 수협 중앙회 등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

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및 당좌대월 포함)을 받음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단, 당 재단과 대출보증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한함)업무를 수행한다.

4 어음보증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 배서, 인수한 어음상의 채무를 보증하며 또,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어음을 취득한 후 자금유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4) 충청남도

(1) 기능 및 역할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는데, 경제통상실 산하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과학산업과 및 투자유치담당관실과 유관기관인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지식재산센터, KOTRA 대전충남무역관,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 산업입지담당은 산업입지제공 및 기업유치활동지원을 하며, 기업애로담당은 홍보 및 판로지원, 경영자금담당은 기업지원, 기업지원담당은 유망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은 국제통상과 통상진흥담당과 KOTRA 대전충남무역관이 상호연계하여 수행하며, 산업인력지원은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담당이 수행한다. 끝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육성은 과학산업과 산업정책담당이 수행하며, 창업보육 및 기술개발관련 사업은 지식산업담당이 수행하고 있다.

(2) 조직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은 투자유치담당관실과 4개과(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

원과, 과학산업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 지원은 주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림 3-6) 충남 경제통상실 조직도

(3) 주요사업

① 입지지원

충남도는 권역별 입지수요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를 적기에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공단지 및 임대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지역의 유망기업 및 신규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자금지원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천재지변 및 노사분규,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

업에게 기업회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및 벤처기업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일시적 신용경색 및 경영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③ 판로지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원활한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제품판매기획전, 공예품대전, 창업박람회, 산업디자인 대전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e-비즈니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해외시장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서울·해외사무소, KOTRA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④ 기술·정보·인력지원

도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 협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경영기술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시·군 취업정보센터와 충남산업인력정보망의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지원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각종 산업인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충남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지원체계의 문제점

(1) 분산형 지원체계

충청남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제통상실 산하에 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과학산업과, 투자유치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을 설치하여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경제통상실 산하 담당부설들간의 상호정보교류가 미흡하며, 관련부서의 신규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실무자간 정기적 협의나 공동사업추진 노력 또한 부진한 실정이다.

기업지원을 위한 충남도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도출연기관들은 별도의 목적사업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유사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중복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원업무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나, 상당수의 지원사업이 충남도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핵심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약화 및 중소기업체들에 지원절차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2)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개의 경우 개별 지원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기업밀착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자금, 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나, 개별지원기관이 정해 놓은 지원프로그램을 기업이 탐색하여 이용해야 하는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이 상존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기관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적합한 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지원기관간 업무의 중복성

충남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중앙본부의 의사와 정책에 따라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유관기관들간의 사업은 일부 유사·중복성을 띄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경영, 정보화, 창업·보육, 산업인력, 마케팅·판로, 기술 및 연구개발, 장비구축, 자금, 입지, 지역전략산업 등으로 나뉘어

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도 출연기관들에 의해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4〉 지원기관별 지원사업 비교

지원기관 지원사업	충남중소기업중 합지원센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 보증재단	충청남도
경영	●	×	×	×
정보화	● ▲	×	×	● ▲
창업·보육	● ▲	● ▲	×	● ▲
산업인력	● ▲	● ▲	×	● ▲
마케팅·판로	● ▲	● ▲	×	● ▲
기술 및 연구개발	×	● ▲	×	● ▲
장비구축	×	● ▲	×	×
자금	● ▲	●	●	● ▲
입지	×	×	×	● ▲
지역전략산업	×	● ▲	×	● ▲

주 : ●는 해당 기관이 다른 지원기관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는 해당 기관이 다른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는 해당 기관이 해당 지원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의 유사·중복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화지원,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지역전략산업지원은 2개 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창업·보육지원, 산업인력지원, 마케팅·판로지원은 3개 기관, 자금지원은 4개 기관 모두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중소기업인들의 중소기업지원기관들과 해당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 향후과제 도출

(1)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지원관련 출연기관 및 충남도는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각 지원기관별로 고유목적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상당수가 중복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은 각종 법률개정 및 정관변경 등의 문제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기관의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원사업별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핵심기관의 역량강화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에 'One-Roof-Service'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자체지원역량의 부족으로 핵심적인 중소기업지원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분한 역량은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기금의 확충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센터 내 인력충원을 통해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중소기업과 관련한 충남도의 직접지원업무를 동센터로 이양하여 행정기관과 사업추진기관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충남도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3) 충남도 출연기관의 역할분담

장기적으로 충남도의 재정부담 해소와 더불어 지원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편의제공과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출연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분담 또는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원기관의 설립목적과 전문화된 능력에 기초하여 기능별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관간에 역할이 중복된 경우에는 업무의 축소조정 및 아웃소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 국외사례 및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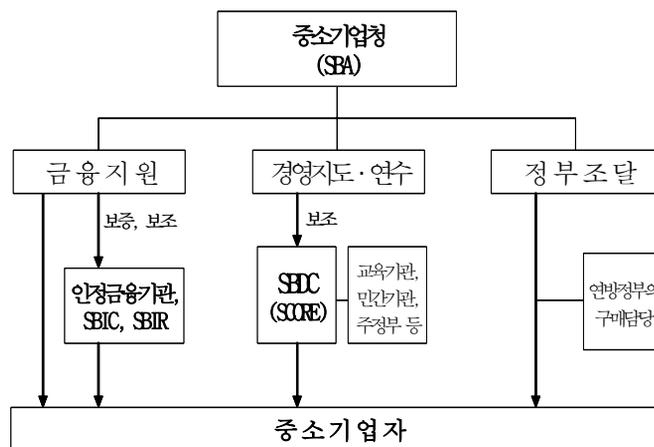
1. 해외 중소기업 지원체계

1) 미국

(1) 지원체계 특징

미국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함에 따라 정부는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기능 및 역할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기관을 활용하면서 민간지원제도를 보완하는 간접지원방식 위주로 지원·육성된다.

미국에서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1953)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청(SBA)을 중심으로 직접 또는 민간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림 4-1)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중소기업청은 '고객지향적 서비스'와 '질 경영추구'라는 2가지 방침아래 중소기업과 관련한 현안문제의 분석과 정책개발·입안은 물론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본)청의 조직은 1청장, 1차장, 4차장보, 26국, 1센터, 그리고 10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본청을 중심으로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와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2) 주요 지원기관(프로그램)의 지원체계

①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중소기업개발센터는 각 주마다 1개씩(텍사스주는 4개) 그리고 총 56개의 리더센터(lead center)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950개 이상의 하부센터와 지방거점(satellite)이 상호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각 센터는 자원봉사자와 파트타임 근무가 있으며 또한 무역협회나 대학, 상공회의소, 퇴직임원경영자문단(SCORE)등으로부터 모집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동 센터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자문, 인력훈련, 기술지원 등 경영전반에 걸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②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자본력이 없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에 정부가 보증하여 대출을 지원하거나 자본금의 증자 시 중소기업청이 참여하여 창업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불리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중소기업투자회사(SSBC)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③ 퇴직임원경영자문단(SCORE)

동 자문단은 성공적인 은퇴 기업인, 관리자와 일부 현역 기업인으로 구성된 기업자문자 모임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다. SCORE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경우에 따라 세미나와 워크샵에 대한 소액의 비용이 부과되며, 이 외

에도 경영개선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SCORE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창업능력평가, 기업의 법적 형태결정, 사업계획 작성, 자금조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유통채널의 평가, 시장확대, 제품개발 및 외부의 환경변화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④ 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SBIR)

SBIR은 신기술개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프로그램으로 1982년 ‘중소기업 혁신연구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국방, 교육, 에너지, 교통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부서 연구개발비 예산의 2.5%를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과 상품화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SBIR프로그램은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때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제1단계는 선정된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가치와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제2단계에서는 선정된 기술 중 잠재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시제품을 제작하여 상품성을 시험·평가하며, 제3단계에서는 신기술이 상품화되는 단계로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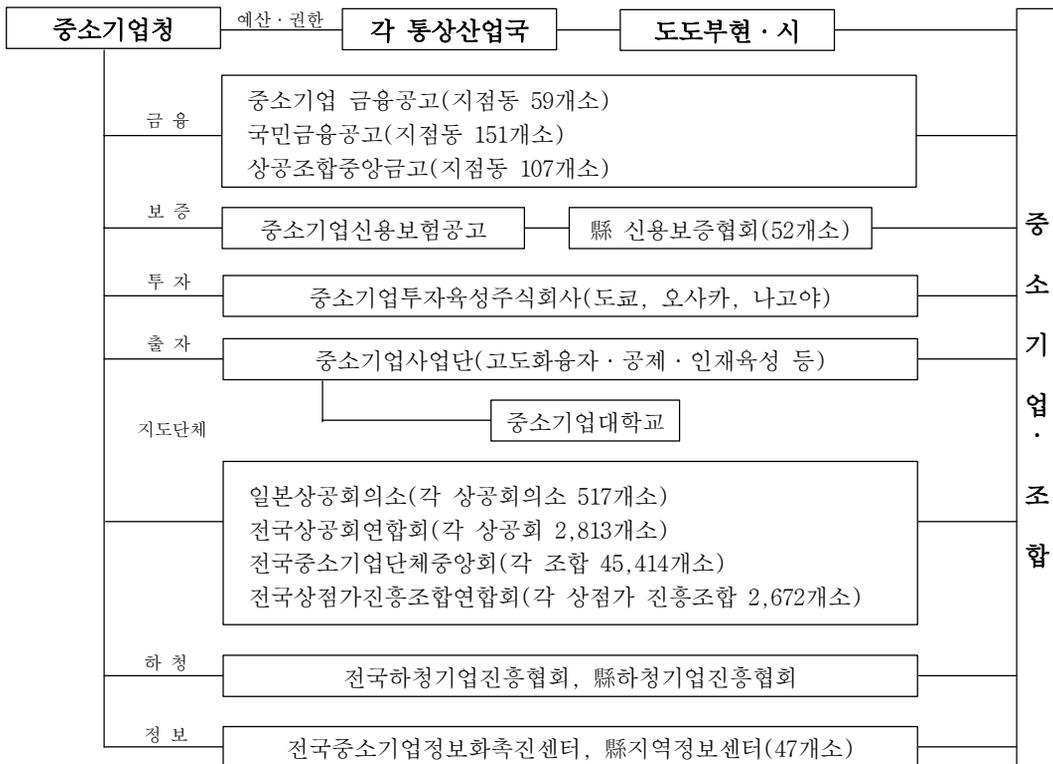
2) 일본

(1) 지원체계 특징

일본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불리한 경영여건을 보완하고 안정적·균형적 발전을 위한 보호육성과 더불어 자유경제시스템에 입각한 공정경쟁여건의 정비 등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설립법, 1948년)이 중소기업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고, 중소기업행정의 지역본부역할을 수행하는 각 통상산업국과 중소기업행정의 일선창구로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실질적 지원업무를 처리하는 都道府縣 등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조직 외에 중소기업사업단(중소기업사업단법, 1980년)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등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타 중소기업관계단체, 금융기관 등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정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단체 등 중소기업지원기관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체계는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기존의 중소기업조합단을 중심으로 지역진흥정비공단, 산업기반정비기금을 통합하여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으로 사업활동에 필요한 조언, 연수, 자금지원, 시설정비, 공제제도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대학교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4-2)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2) 주요 지원기관의 지원체계

① 도도부현 중소기업지원센터

■ 도도부현 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역산학관 연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기관은 공공시험연구기관, 대학, 지역기술이전기관 등이 있다. 도도부현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들 기관의 특성 및 역할분담에 따라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시험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게 개별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거나,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대학과 지역기술이전기관 등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을 할 경우 어드바이스나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한다.

■ 신규사업창출 지원체계와의 연계

신사업창출촉진법에 기초하여 중심지원기관을 축으로하여 구축된 신규사업창출지원체계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 예산집행 등의 부문에서 가능한 종합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므로 중심지원기관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별도의 기관인 경우 지역에서는 상호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여타지역 지원기관과의 연계

여타 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 관련 단체, 자금금융기관, 경영자원확보를 지원하는 기관이 소재하는데, 도도부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는 중소기업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 지원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각 기관 창구담당자의 교류, 도도부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각 지원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원기관과 중소기업 지원문제를 공유할 수 있으며, 각종 지원시책의 홍보를 원활하게 한다.

②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중소기업지원센터는 창업자나 지역중소기업을 지원대상자로하여 세부적인 지

원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설치되었다. 지역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창업자를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중소기업지원센터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도부현중소기업지원센터, 상공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단체중앙회, 여타 지원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이들 지원기관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대상기업이 이용가능한 각종 지원시책이나 관련지원기관이 보유한 인력·기술·특허정보와 같은 경영자원에 대해 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하고, 정보제공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③ 중소기업사업단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등 총합지도기관으로서 중소기업사업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사업단은 포털사이트(J-Net21)을 활용하여 각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정보공유화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한다. 또한 중소기업사업단은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중심으로 중소기업·벤처종합지원센터와 도도부현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용을 돕기위해 경영·재무 등 경영전반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경영·기술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각종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센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중소기업의 편리성을 고려한 지원시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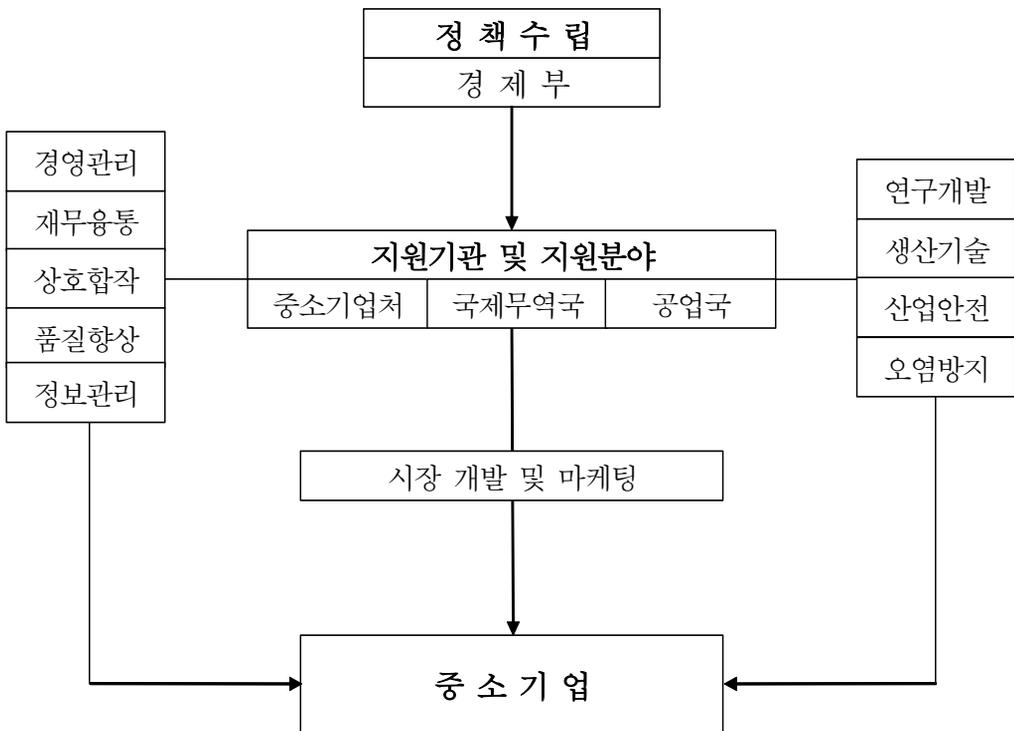
3) 대만

(1) 지원체계 특징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배양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로 금융지원에만 치중하던 지원활동을 경영관리의 전분야로 확대시킴으로써 기업경영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합리적인 지원망을 구축하여 지원활동이 보다 유기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는 중소기업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각종법규에 의해 구축·운동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제부산하의 중소기업처 이외에 공업국, 국제무역국, 상업사 등 4개의 조직이 10개의 지원정책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1981년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전담처리하는 경제부 중소기업처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1991년에 '중소기업발전조례'를 제정하여 주요중소기업 지원업무 내용을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림 4-3)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 유기적인 통합시스템 구축

지도기관들에게는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분야가 할당되어 있으며, 지원분야의 지원항목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원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원체계별 주관기관을 경제부 산하의 중소

기업체, 공업국 및 국제무역국 등에 국한시키고 이들에게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분야별 지원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통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도와 서비스기능의 강화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인위적인 보호·육성보다는 모든 중소기업들의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체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그들이 안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현장진단의 강조

대만의 모든 중소기업지원활동은 현장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해당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진단은 항상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현장에 파견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업체의 문제점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현장진단에 임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해당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은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동시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 지원성과의 확산효과 중시

중소기업의 지원활동은 그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다른 중소기업들이 지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성과가 좋거나 시범적인 업체에 대한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성공사례를 모은 간행물을 발간하여 업계에 보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엄격한 심사에 의한 선별적 지원

대만정부는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개별기

업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자발적인 개선의지, 발전잠재력 등을 엄격히 평가·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정부가 지원신청자격을 각 지원분야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막연히 정부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보다는 자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업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2) 주요 지원기관의 지원체계

① 중소기업처

대만정부는 1981년 경제부내에 중소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처'를 설립, 중소기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경영환경조성과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공정경쟁, 능력발휘, 자립성장 등 여러 측면에서 중소기업성장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처는 전체 중소기업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재무융통, 경영관리, 정보관리, 품질향상과 상호협조의 5가지 시책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처를 중심으로 여러 지원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하였다. 또한 대중, 대남, 고용 등에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각 분야에 대한 수요 및 정보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② 공업국

대만은 지난 1968년 '국제경영협작발전위원회(경합회)'에서 중소기업전담처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70년 경합회의 조직이 개편됨과 동시에 경제부에 공업국이 설립되어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공업국으로 이관되었다. 공업국은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애로 해소 및 연구개발 지원, 공업안전, 환경오염방지 등의 시책을 담당하며, '중소기업연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지원업무를 개시하였으나 비공식기관의 성격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도 증가하여 1980년 '경제부 중소기업처 조직조례'를 마련하였다.

③ 기타

대만은 '중소기업발전조례'를 통해 경제부 이외에 성(시)정부와 현(시)정부 등 지방 정부를 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지원은 경제부 중소기업처의 각 지역 서비스센터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서비스센터 및 경영관리 지도체 제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원업무를 실제로 집행해야할 기구는 공사 립연립기구, 금융기구, 신용보증기구, 무역촉진기구, 상공단체 등이며, 이 기구들은 재무융통, 경영관리, 생산기술, 연구개발, 공업안전, 오염방지, 시장개발 및 마케팅, 정보관리, 상호협작, 품질체고 등 10가지 지도체계에서 전문적이면서 합리적인 지원 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각 지도체계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 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각 지원체계 간에는 상호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중소기업발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시사점

(1)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청 소속의 56개 중소기업개발센터가 950개 이상의 하부센터 및 지방거점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지역밀착형 중소기업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국가센터와 47개의 도도부현 및 13개 광역시 센터, 그리고 300개의 지역중소기업센터가 상호연계 되어 있다. 대만 역시 현장지도와 서비스의 제공이 강조 되며,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과 지도 및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절 차가 비교적 간단·명료하며, 지원성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유기적인 통합시스템의 성격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은 독립적 위상을 가지면서도 경제 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조직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지원을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은 자체 지방조직, 지방정부, 금융기관, 대학 등 민간기구들과의 연계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자체 지방조직인 통상산업국이 지방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만 역시 지원체계별 지원기관을 경제부산하의 중소기업처, 공업국 및 국제무역국 등에 국한시키고 이들에게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분야별 지원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통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설문조사

1) 개요

(1) 조사목적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지원주체별로 복잡·다기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공급자중심의 시책 및 시책운용의 중복성 등 여러 이유로 지원효과가 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시책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각종 시책의 운용을 체계화하는 등 실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도모해야한다. 이를 위해 도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원기관들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표본추출방법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5,926개)를 대상으로 층화랜덤

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지역별, 업종별, 업체수에 대해 층화(Stratification)를 비례배분(Proportional Allocation)하여 단순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ing)로 1,517개 업체를 추출하였다.

(3)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기간 : 2007. 2. 1 ~ 3. 10 (38일간)

조사방법 : 설문지 우편조사

(4) 회수율 및 표본오차

회수율 : 296개(19.5%)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5.7%p)

(5) 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방법

① 작성체계

본 설문조사서의 작성은 충청도청과 충남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작성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표본추출 및 설문조사서 설계는 충청도청 기업지원과, 법무통계담당관실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중소기업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업지원과 및 시군청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으며, 설문분석은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팀에서 분석하였다.

② 설계

설문조사서는 충남의 기업입지환경 9문항, 기업경영상의 애로사항 11문항, 현재의 충남기업지원에 관련사항 15문항, 기타 3문항의 총 38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응답과 관련한 사항은 리커드 5점 척도와 명목척도가 설문조사내용에 맞도록 혼합되도록 작성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 혹은 산업이 입지와 상관이 없

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리커드 척도이외 별도의 응답란을 두어 조사하였다.

③ 분석방법 및 유의사항

설문분석은 SPSS 12.0으로 분석 리커드 5점 척도의 경우 매우좋다(5점), 좋은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나쁜편이다(2점), 매우나쁘다(1점)로 점수화하여 측정하였다. 본 설문분석에서는 리커드척도를 점수화하여 사용하였으며, 비교대상이 있을 경우 상대적인 값으로 비교가 가능하지만, 독립문항내에서는 절대적인 값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문응답 일반사항

(1) 16개 시·군별 설문응답률

본 조사의 설문표본은 충청도내 총 1,5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회수율(응답율)은 19.5%로 296개 업체가 응답하였다. 회수율은 계룡시(100.0%)가 가장 높았으며, 태안군(35.0%), 서천군(17.4%)순이었으며, 청양군(7.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군별 응답자분포로는 천안시(18.9%)로 가장 많으며, 아산시(12.2%), 당진군(9.5%), 금산군(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시군별 설문응답률

구 분	빈도수	응답업체 분포율	회수율
천 안 시	56	18.9	15.6
공 주 시	16	5.4	15.2
보 령 시	18	6.1	26.9
아 산 시	36	12.2	16.8
서 산 시	14	4.7	25.5
논 산 시	25	8.4	20.7
계 룡 시	4	1.4	100.0
금 산 군	28	9.5	20.4
연 기 군	26	8.8	20.2
부 여 군	9	3.0	25.0
서 천 군	11	3.7	31.4
청 양 군	2	0.7	7.4
홍 성 군	10	3.4	17.9
예 산 군	6	2.0	12.0
태 안 군	7	2.4	35.0
당 진 군	28	9.5	27.2
합 계	296	100.0	19.5

주 : 회수율은 설문표본 대비 회수된 설문부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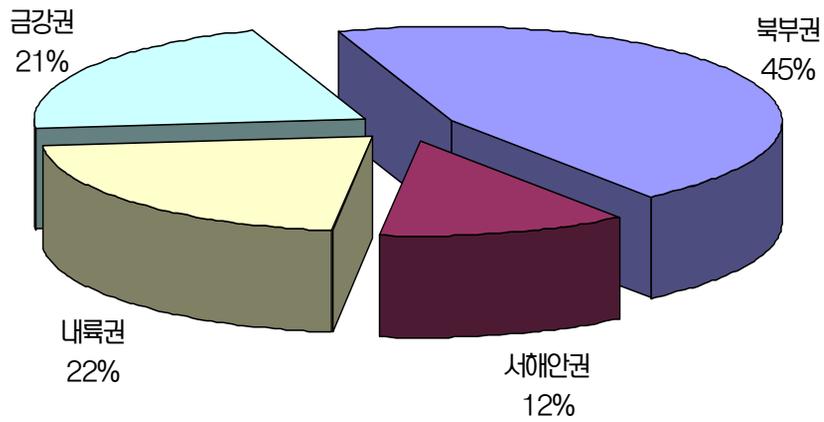
(2) 권역설정 및 권역별 분포현황

① 권역설정

충남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4대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권역설정은 제3차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권역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② 권역별 분포현황

응답업체의 권역별 분포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북부권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해안권이 1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4) 권역별 응답업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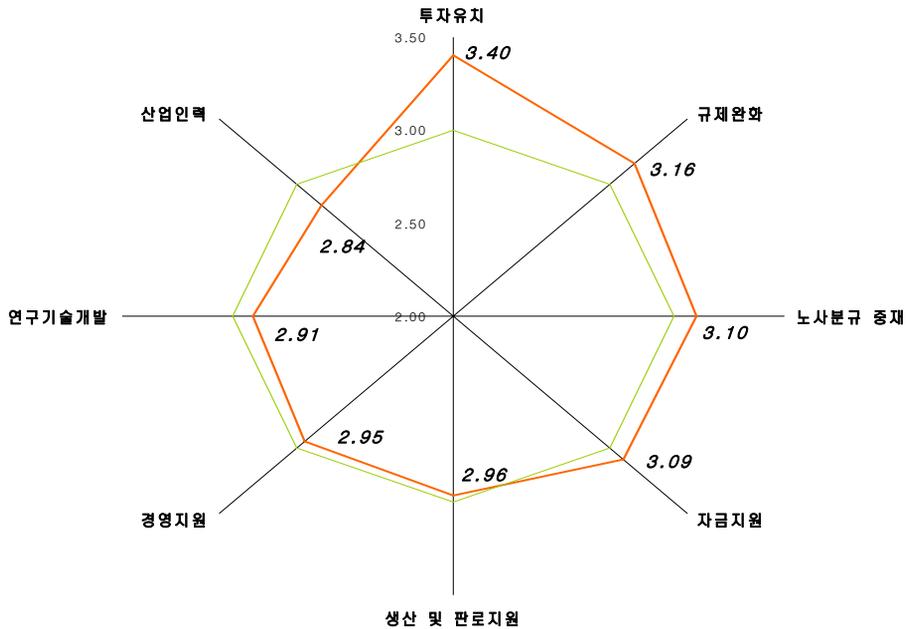
〈표 4-2〉 시군별 및 권역별 분포

구분	지역	빈도수	응답업체분포율	회수율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134	45.3	18.4
서해안권	보령, 서천, 태안	36	12.2	29.5
내륙권	공주, 계룡, 연기, 청양, 홍성, 예산	64	21.6	17.3
금강권	논산, 금산, 부여	62	20.9	21.1
합계	-	296	100.0	19.5

3) 설문조사 결과

(1) 기업지원(종합)

충청남도 및 시군의 기업지원 노력에 있어 투자유치(3.40), 규제완화(3.16) 등의 기업지원노력은 높게 평가되었지만, 산업인력지원(2.84), 연구기술개발 지원(2.91), 경영지원(2.95) 등의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충청남도의 기업지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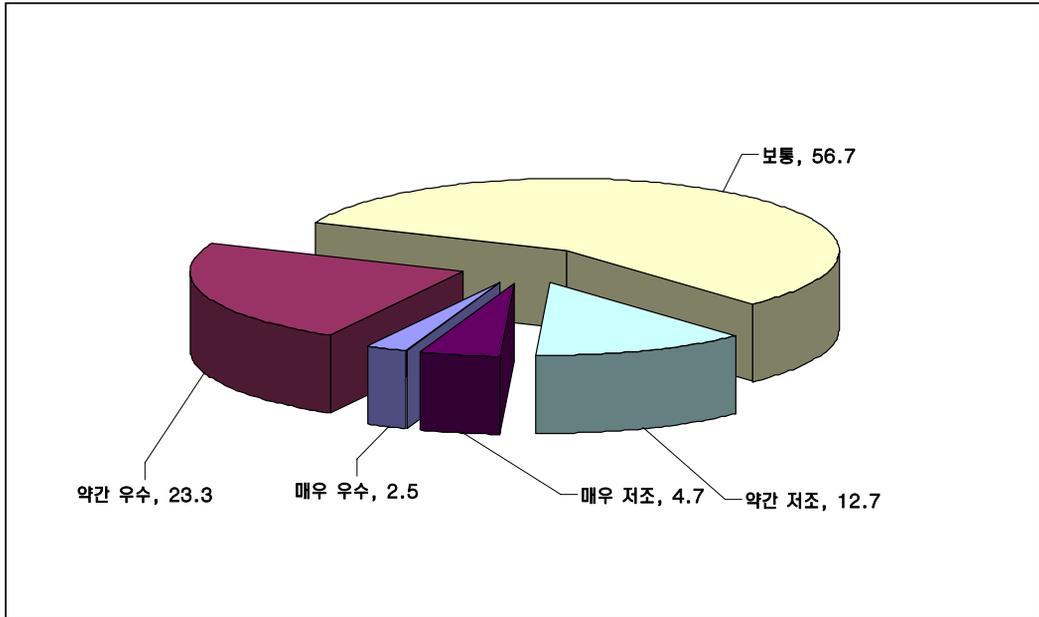
〈표 4-3〉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의 기업지원 노력

구 분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규제완화 노력	2.5	26.0	57.8	12.3	1.4
투자유치 노력	6.4	39.4	42.8	11.0	0.4
노사분규 중재노력	0.8	15.3	78.1	5.0	0.8
자금지원 노력	1.4	25.4	56.7	13.6	2.9
생산및 판로지원노력(시장개척 등)	1.4	15.5	61.9	20.5	0.7
연구기술개발노력(기술개발 사업화지원 등)	1.4	14.1	60.3	22.0	2.2
경영지원노력(컨설팅 등)	1.8	13.9	63.9	18.2	2.2
산업인력 지원노력	1.1	11.1	60.6	25.4	1.8

(2)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지원 활동

㉠ 충남의 기업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충남 중소기업은 충청남도가 타시도에 비해 기업지원활동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업지원시책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25.8%가 기업지원활동이 우수하거나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6.7%는 비슷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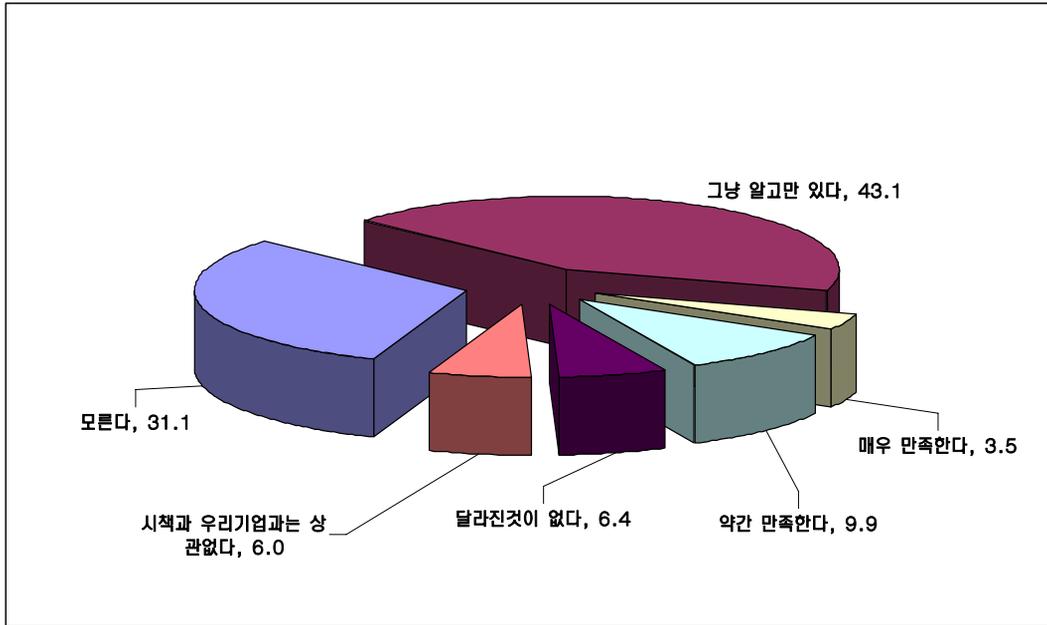


(그림 4-6) 충남의 기업지원활동

이러한 자치단체의 기업지원활동에 있어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5.0%로 응답되었으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도 32.2%에 달한다.

②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시책 관련

지난 2002년부터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시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31.1%는 시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책을 그냥 알고만 있는 기업도 43.1%에 해당하여 실제로 기업지원시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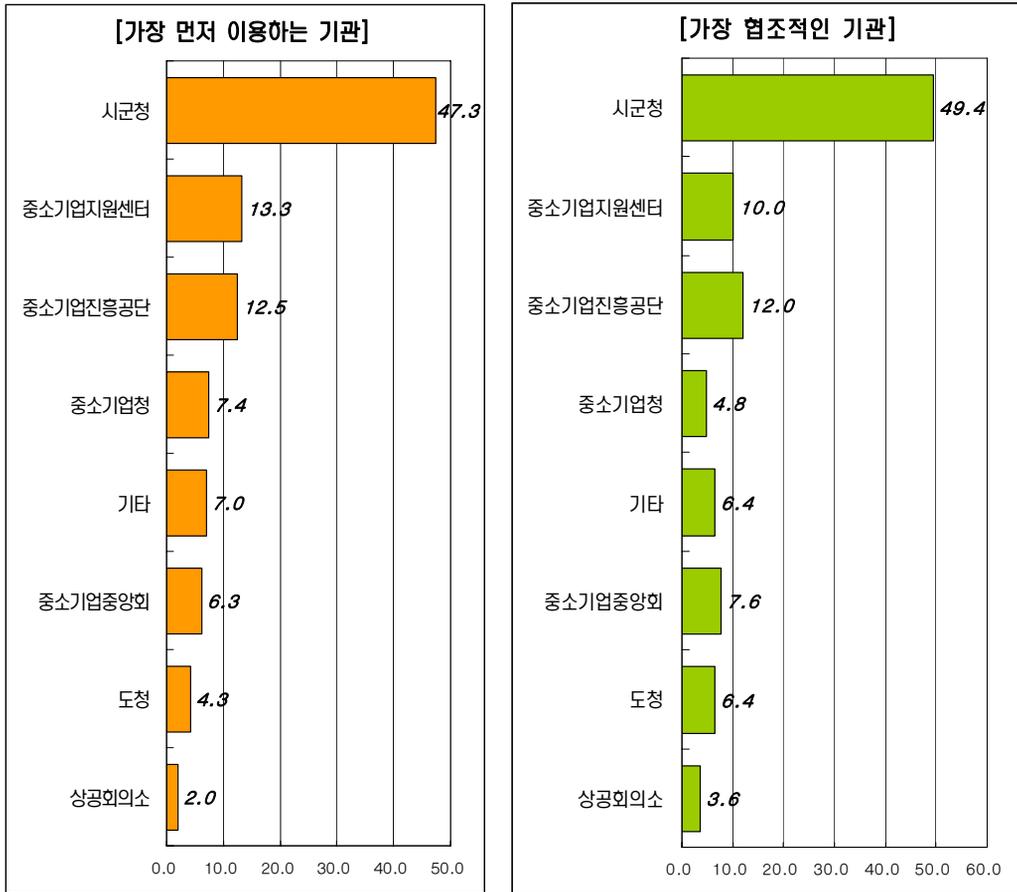


(그림 4-7)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시책평가

그러나 시책의 수혜를 받은 업체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67.9%정도이며, 반면 시책수혜를 받았어도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2.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기업지원시책을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의 권역별 분포로는 서해안권이 38.2%, 내륙권이 33.3%, 북부권이 31.0%, 금강권이 25.0%, 서해안권과 내륙권이 현 기업지원시책의 홍보 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이용 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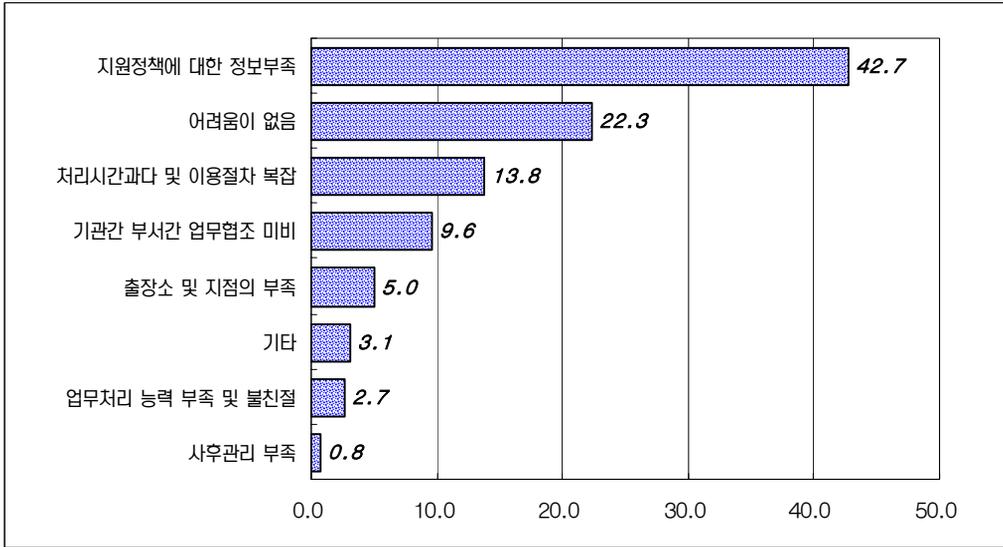
기업 경영에 있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기관은 시·군청(47.3%)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13.3%), 중소기업진흥공단(12.5%)순이다. 또한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있어 가장 협조적인 기관으로는 응답기업의 과반수가 시·군청(49.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12.0%), 중소기업지원센터(10.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8) 가장 먼저 이용하는 기관 및 협조적인 기관

④ 지원기관 이용시 불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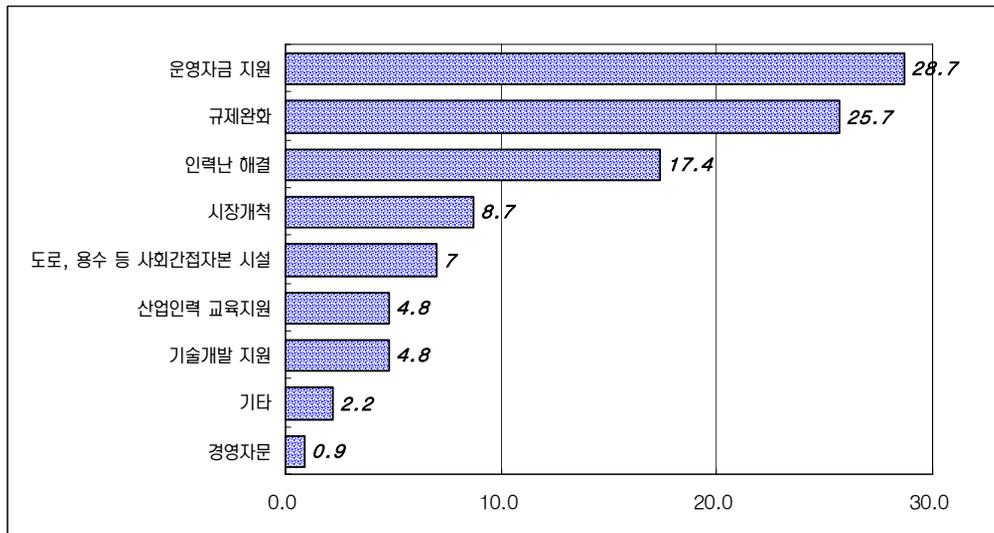
행정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는 중앙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42.7%)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한 對 기업 홍보 등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기관간의 업무협조 미비(9.6%), 출장소 및 지점의 부족(5.0%)으로 인한 기업의 업무처리시간 지연 및 이용절차 복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거 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이었던 업무처리 능력 부족 및 불친절은 2.7%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행정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이용시 어려운점

5 개선 요망사항

행정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는 기업의 운영자금지원(28.7%)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운영과 관련한 규제완화(25.7%), 그리고 열악한 인력난 해결(17.4%)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행정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의 개선필요 사항

4) 정책적 시사점

(1) 지원기관 및 시책에 대한 홍보강화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유사한 지원사업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담당할 때 지원절차상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 신청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함에 따라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31.1%가 모른다고 응답함에 따라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적시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체계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충청남도 및 출연기관간 네트워크 부재에 따른 기업의 탐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자체 홍보수단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핵심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판로 등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One-Roof-Service'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지원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있어 가장 먼저 이용 또는 문의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라는 질문에 시·군청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47%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3.3%에 지나지 않아 동 센터가 충남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 역할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 센터가 핵심지원기관으로의 역량이 미흡한 원인으로는 운용자금 부족, 인력부족, 지원사업의 부족, 홍보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의 중앙본부 편중화 현상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5장 충남 중소기업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현재 중앙부처 및 충남도,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록 각 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라도 지역단위에서는 재원의 차이나 주무기관과 관계없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충남도 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전문화된 능력에 기초하여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단계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핵심 허브기관으로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단계로 출연기관간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된 사업이 유기적인 연계하에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로 지역단위에서 중앙부처 및 충남도,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들간에 연계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 단계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1) 1단계 : 지원기관별 역할분담

□ 역할분담의 필요성

충남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간에는 역할 및 기능이 중복적인 탓에 각종 지원시책들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도내에 설립된 출연기관은 대부분 중앙정부 부처별로 관리·운영되는 탓에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실제수요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 기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는 각각 산업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과 산업기술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의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충남 출연기관별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② 역할분담의 기본방향

현실적으로 단기 내에 중소기업지원체계를 통합 내지 일원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기업의 실제수요에 적합한 지원프로그램을 기관별로 발굴·시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기관별 설립목적과 전문화된 능력에 기초하여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 및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출연기관간 효율적인 연계협력체계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③ 역할분담 및 재정립 방안

장기적으로 충남도의 재정부담 해소와 더불어 지원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충남도가 도내 기업 및 경제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도가 출연한 기업지원기관들로는 충남중소기업지원센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대표적이다. 이 중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업무는 기업자금보증업무로서 고유한 성격을 가지나,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는 일정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아 이를 해소한다면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충남도 출연기관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기능별 역할분담

충남테크노파크는 도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기술이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개발된 기술의 디자인, 시제품생산, 마케팅 등 기술상용화에 전문화 한다. 즉, 충남테크노파크는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한

상용화 이전단계까지의 과정을,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상용화 이후의 단계에 특화한다. 기관간에 역할이 중복된 기능의 경우 업무의 축소조정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업무의 전문화·특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능은 축소하거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표 5-1〉 기능·업무별 역할분담(안)

구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충남TP	비 고
연구개발지원		△	◎	·충남TP: 산학연 공동의 기초·응용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실용화	산학공동개발	△	◎	·충남TP: 기술개발 역할 ·충기센터: 디자인, 시제품 등 비즈니스화
	시제품생산	◎	○	
창업보육		○	○	·여러 지역·기관에서 분산지원
자금지원		◎	▽	·창구의 단일화 필요
인력양성		○	○	·충남TP: 고급기술인력 양성 ·충기센터: 직업·기술인력양성기관과 협력
마케팅·경영지문·수출지원		◎	▽	·충남TP: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
정보화		○	○	·양기관 DB연동화 추진

주 : ◎ 중점기능, 일반기능, △ 연관기능, ▽ 축소필요기능

2) 2단계 : 핵심지원기관의 역량강화

① 역량강화 필요성

충남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인들에게 One-roof-service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자체 지원역량의 부족으로 핵심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 기관이 중소기업발전의 핵심적인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② 기본방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장에서 기업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내 산재한 다양한 유관기관으로 안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 One-stop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사업이나 인력·기술·경영·창업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한다.

③ 역량강화 방안

■ 기금확충

효율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업지원모델개발 → 적용 및 추진 →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시스템을 선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자립형 기금이 확충되어야 한다. 아울러 운영출연금 외에도 별도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관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토록 한다.

■ 인력의 양적·질적 개선

기업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즉,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과제를 도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별인력의 인력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투자의 확대와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 충남도의 직접지원업무 이양

중소기업과 관련한 충남도의 지원업무를 일부 이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업무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양하여 행정기관과 사업추진기관간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간에 역할분담에 대한 업무 위탁협정서를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3단계 : 지역단위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①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복잡·다기화에 따른 지원효과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중앙부처 및 충남도,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을 총 망라하는 연계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을 일괄적으로 종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지역의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관련기관들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과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체별 파트너십의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단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중앙부처 및 충남도,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충남 지역단위의 지원체계속에서 운용하기 위해 지원기관간 파트너십을 선구축한다. 아울러 핵심 허브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과 서비스 방식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충남지역의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파트너로써 참여하게 유도함과 동시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간 원활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③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 지역단위 파트너십 구축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기관의 전담직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충남지역 내 다양한 지원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각 지원기관의 장점을 살려나간다. 다만, 모든 파트너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경영구조 및 회계시스템하에서 조정·관리·운영되고, 공동재원으로 프로그램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방식 즉, 완전한 통합(full integration)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트너 기관들에게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에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칭)중소기업지원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시책 및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들이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과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모색하고 관련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관련 지원기관을 모두 참여시키는 통합적 협의조정기구인 (가칭) 중소기업지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각 기관들이 주요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심의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 One-stop Solution Platform 구축

One-stop Solution Platform은 공급자와 수요자(중소기업지원기관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자(개별 중소기업지원기관)를 상호 연계시키기 위해 지원상담과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의미한다. 실제로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지원기관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아울러 특정기관이 모든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현행 법·제도하에서 현실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기업과 지원기관, 그리고 지원기관과 지원기관을 상호 연계시켜 줄 중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기업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통합적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중개 및 단일상담창구로서 원스톱솔루션플랫폼을 관련 기관별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 자금, 신용보증, 판로, 인력, 수출, 경영, 기술·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기관간에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둘째,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관련 정보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DB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시킴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기능을 담당한다.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충남도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장별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지원체계구축과 관련한 이론으로 지역거너번스, 네트워크이론, 지역혁신체계론을 검토하였고,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충남도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기능 및 역할, 조직구성, 주요사업실태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원체계상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원기관들간 협력체계구축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충남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지원기관별로 복잡·다기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기관들간 역할 및 기능이 중복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인 탓에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여전히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시책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들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만, 특정기관이 중앙부처, 충남도, 유관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현행·법제도 하에서는 제약요인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지역단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도내 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전문화된 기능에 기초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도차원에서는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핵심지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역량강화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다음으로 출연기관들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지원기관간에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여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공동추진 및 종합지원을 통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중앙부처, 충남도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충남지역단위의 지원체계속에서 운용하는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고려할만 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지역 내 다양한 지원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파트너십 구축을 우선하고, 통합적 협의조정기구인 중소기업지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내 모든 지원기관간에 업무협약을 맺어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중개 및 단일상담창구로서 원스톱솔루션플랫폼을 관련기관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중소기업지원기관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자(개별 중소기업지원기관)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지원체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 이희용·박태경, “중소기업지원 및 혁신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진흥공단, 2004.
- 나상균·노상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방안”, 전북발전연구원, 2005
- 문미성,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역할분담”, 경기개발연구원, 2004.
- 오태석, “인천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4.
- 권영미, “지역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5.
- 오철호, “중소기업정책의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정책학회, 2004.
- 최원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방안 : 반월·시화공단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조현상, “대전·충남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은행 대전지점, 1997.
- 이광시,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조이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모형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5.
- 허만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선방안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박동수·정성한·김기남,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유효성 평가”, 영남대학교 산업연구소, 2005.
- 배광선,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9.
- 중소기업진흥공단, “외국의 중소기업지원기관 현황”, 1997.
-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 대만, 일본의 중소기업정책방향”, 1998.
-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일본 및 미국의 중소기업의 조직과 지원시책” 1998.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프랑스의 중소기업 실태와 중소기업시책”, 1997.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대만 및 캐나다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지원정책”, 1998.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독일 및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지원정책”, 1999.
- 한동안, “영국의 최근 중소기업정책 변화내용”,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에 관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000.
- Carmichael, P. 2002, *Maintaining a Distinctive Public Administration: the Isle of Man Civil Service Since 1962*, *Public Administration* Vol. 80 No. 2, pp257-282
- Cloke, Paul, Milbourne, Paul and Widdowfield, Rebekah, 2000, *Partnership and Policy Networks in Rural Local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Vol. 78 No. 1
- Davies, A. 2002, *Power, politics and networks : shaping partnerships for sustainable communities*, *Area*, Vol. 34 No. 2, pp190-203
- Leach, Robert and Percy-Smith, Janie, 2001, *Local Governance in Britain*, Hampshire: Palgrave Newman, J. 2001, *Modernising Governance*, London: SAGE
- Lasker, R. D., Weiss, E. S. and Miller, R. 2001, *Partnership Synergy: A practical framework for studying and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advantage*, *The Millbank Quarterly*, Vol. 79 No. 3
- OECD. 2001, *Engaging Citizens in Policy-making: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PUMA Policy Brief No. 10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팀 신동호 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07-17 · 충남 중소기업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글쓴이 · 신동호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7년 10월 31일 / 발행 · 2007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동아일보빌딩 5-6층 (301-745)

전화 · 042-820-1176(산업경제연구팀) / 팩스 · 042-820-1179

ISBN · 978-89-6124-014-7 93300

<http://www.cdi.re.kr>

©2007.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